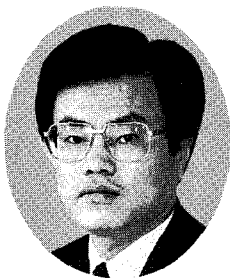




위협수위 넘은 農業輕視 풍조

잇따르는 '적전분열 행동' 농업경시 풍조 짚어져
농업계 지도자 나서 농업보호 정서 확산 시켜야

■ 오덕화 농민신문 편집부국장



지난 7월 5일 조선일보 e-mail 클럽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정치정보에 “정부 부처간 이견(異見) 공개한 뒷이야기”라는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올린 기자는 외교통상부를 출입하는 정치부 이하원 기자.

한덕수 통상본부장이 러시아와 스페인등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자실을 찾았다는데 기자들의 관심은 한·중 마늘협상의 뒷이야기가 관심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한 본부장은 마늘문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한 뒤 갑자기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분명한 이슈가 또 있다”고 입을 열었다고 한다.

출입기자들로서도 귀가 번쩍 뜨일 '폭탄선언' 이었다는데 요지는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WTO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통상마찰이 빚어지면 WTO에서 패소 할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이었다고 한다.

이기가가 전한 한본부장의 발언내용은 대충 이렇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돼 있다. 이것은 통상분쟁이 될 요소를 가지고 있다. 시행규칙에는 고기를 전문적으로 구워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가격에 수입산 표시를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있다. WTO는 쇠고기를 수입과 국산을 구분해서 판매하는 제도를 WTO 규정에 위반 된다고 했다. 우리가 상소를 했지만 패소를 할 것이 확실하다. 지금하려는 규정은 구분 판매제보다 더 지독한 제도다. 음식점에서 만드는 것에는 주방장의 손때도 들어있다. 기름도 넣고 참깨도 넣고, 서비스가 포함된 것이다. 결국 이 제도를 왜 하느냐를 교역상대국에서 주시하게 돼 있다. 원산지를 밝혀 수입쇠고기를 덜 먹게 하려는 것이라면 분명히 WTO에서 패소하게 될 것이다.”

한본부장은 이에 덧붙여 “가능하면 (정부)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문제가 있음에도 마구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기에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하고 “전체 국익을 위해 (이 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기지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한본부장의 이날 행동을 두고 적전분열(敵前分裂)이라며 나무라는 소리도 많다”며 이기자 자신도 한본부장의 행동이 타당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WTO에서 100% 패

소할 것이 확실하다면 마땅히 사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양비론적 입장을 취했다.

힘 실리는 '농업포기 정서'

한본부장의 이날 발언은 일부 신문에서 통상문제와 관련 정부 부처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정도로 조그맣게 다뤄졌다.

그러나 한본부장의 발언내용은 농업쪽에서 볼때 결코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입고기의 원산지를 음식점에서 표시토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과 이를 풀어가는 해법에서의 차이이다. 적어도 일국의 통상책임자라고 하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급효과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상식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나온 것은 '수입고기 구분판매제'가 WTO에서 패소 할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대안이다. 미국 등이 WTO에 이를 또 제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통상본부장이 앞장서서 “질것이 뻔한데 왜 하느냐”는 식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다. “소비자도 음식점에서 어느나라 고기인지는 알고 먹을 권리는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당당하게 펴는 것이 상식이다.

문제는 그러한 돌출발언이 우리사회에서 그대로 수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농업을 점차 포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후자쪽에 힘이 실리고 있고 그같은 정서가 한본부장의 입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본부장은 이에앞서 한·중 마늘분쟁이 불거졌을 때 “중국산 마늘의 수입제한 조치때 적극 반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혀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농민단체장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오렌지 수입급증으로 과일값이 폭락하고 있다고 하니 “대체 품목을 키워라. 소비자들이 값싼 수입오렌지를 먹으면 안되나. 수입오렌지 칠레산 포도 때문에 국산과일이 모두 망하지 않는다.”로 응답했다고 한다. 또 농민의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농촌 현실이 피폐 했다고 하자 “시장개방 때문에 농업이 망하지 않는다. 피폐한 농촌현실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맞받아 쳤다고 한다.

개인적 ‘소신의 탈’ 쓴 큰 뜻 발언

한본부장이 보여준 이같은 일련의 돌출행동은 지금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농업을 보는 시각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가늠케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발언이 개인적 소신일 수는 있으나 그동안 입조심을 해오던 많은 경제각료들이나 일반경제 학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발언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결코 일과성으로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적인 석학 엘빈 토플러가 무슨 생각으로 “그동안 낙후산업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농업이야말로 21세기 미래산업”이라고 단언했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쿠즈네츠 교수가 지적한 “농촌개발이 안된다면 중진국까지의 공업화 도약은 가능하지만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농업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들이받는 일은 없었다. 간혹 그런일이 있었지만 혹독한 여론의 물매를 맞고 물러섰다. UR협상이 진행중일 때 김천주 한국주부클럽연합회장은 양곡유통위에서 “농민들이 쌀값을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 쌀을 수입하자고 하겠다”고 했다가 큰 봉변을 당한 일이 있다.

박수길 당시 주 제네바 대사는 “쌀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이 문제가 돼 호된 여론의 질책을 받았고 임종철 서울대교수(현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는 “쌀을 꼭 100% 자

급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글을 한 경제지에 실었다가 ‘대표적인 반농업적 비교우위론자’라는 혹평을 들으며 농민들의 거센 항의에 혼쫓이 난 일도 있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사회의 표면적 정서는 농업은 보호되어야 하고 농민은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제부처나 연구기관·학계에서 비교우위론을 앞세워 ‘축소지향적 농업’을 추구하면서 농업정책에 탄축을 걸기는 했어도 드러내 놓고 농업과 농민을 매도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IMF를 겪으면서 부터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도 기업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경제주체의 고통분담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

게 되고 이과정에서 농업은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 치부되고 농업보호 논리가 힘을 잃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농촌개발 없는 선진국’ 사상누각 일뿐

지난해 11월 WTO차기협상을 앞두고 모두 협상이 열리는 시애틀에 가서 시위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 때 조선일보와 한국개발원은 공동으로 UR 농산물협상 사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의 결론은 ‘소비자 이익위주의 협상론’이다. 이 토론의 의미는 국책연구기관과 보수언론이 연합전선을 펴고 농업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지만 농업계에서는 이를 간과했다. 이어 11월23일 중앙일보가 ‘농산물 개방은 땀땀이’라는 칼럼을 통해 이 연합전선에 합류했다. 그러나 농업쪽에서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농민단체들은 농·축협통합 등 농업내부의 문제에 훨씬 더 열을 올렸다. 농협은 축협과의 통합문제로 힘을 잃고 있었다. 농업관련 학계인사들도 도도히 흐르는 대세의 변화를 미리 읽었는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힘의 공백기에 농업을 둘러싼 비우호적 세력들은 자연스레 그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었다.

한·중 마늘분쟁이 벌어졌을 때 농림부를 제외한 관계부처와 언론,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대기업이 운영하는 연구소, 학계인사들이 보여준 것은 ‘농업보호의 무용론’이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산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봉장을 맡은 것이 한본부장이고 언론이 주역을 담당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조언을 맡았다.

한본부장의 돌출발언이 여과없이 수용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봇물이 터지듯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확대 재생산 되어 나갈 것이다. 더 지독한 논리와 합리성으로 포장된 정책들이 농업을 압박해 올 것이다.

따지고 보면 지금 농업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논농업 직불제, 농가부채대책, 간척지의 농지보전, 농지전용의 규제강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축협 통합비용 지원과 축협 부실대책,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수입육류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풀리고 있는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시점에서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은 왜 농업은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 엘빈 토플러가 무슨 생각으로 “그동안 낙후산업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농업이야말로 21세기 미래산업”이라고 단언했는가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쿠즈네츠 교수가 지적한 “농촌개발이 안된다면 중진국까지의 공업화 도약은 가능하지만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는 일이다.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이 무엇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농민에게 현금으로 주는 직접지불제를 농업정책의 근간으로 전환했는가를 냉철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는 농업을 이끌고 있는 농업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할 일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노력이 농업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전반으로 확산 되도록 하는 것이다. **농약정보**